

위험한 일본, 겁없는 여행객들

지진·항공기 사고 대형재난 잇따르는데 광주·전남서 대거 몰려 엔저 효과에 안전불감증 우려...여행업계가 되레 취소 등 권유도

새해 벽두부터 일본에서 지진,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광주·전남에서 일본으로 가려는 여행객이 몰리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광주·전남지역 여행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일본 여행객 중 재난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1월 중 일본으로 운항하는 전세기 예약도 만석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여행일정을 취소하거나 꺼리는 추세와 달리 최근 일본 여행객들은 “지진 발생 지역과 거리가 먼 곳은 괜찮다”는 등 이유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재난 전문가들은 일본을 사실상 재난 위험국가로 본다.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7.6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4일까지 500여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져 최소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진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다 사망자 숫자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치는데 뒤편적으로 지난 2일에는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착륙한 일본항공(JAL) 비행기가 지진 구호 물자를 나르던 해상보안청 비행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해상보안청 비행기에 타고 있던 5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와 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광주·전남지역 일본 여행객이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해외 수요가 급증한데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여행비용 부담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원·엔 환율은 지난해 8년만에 처음으로 800원대로 폭락했으며 4일 현재 909.6원에 머무르고 있다.

5일자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는 비행

기표를 예매한 박지호(여·20)씨는 지진 소식을 들었지만 여행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4박 5일 동안 교토와 오사카 일대를 여행할 계획이다.

박씨는 “오사카는 지진 발생 지역과 떨어져 있어 진도 4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현지에는 지진에게도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여행이 성인이 돼서 친구랑 가는 첫 해외여행인데다 대학 입시도 끝난 상황이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예약 취소를 예상했던 여행사들은 일단 안도하고 있다.

광주 지역 하나투어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전세기는 오사카와 후쿠오카 쪽을 가는데,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서쪽이지만 오사카는 동쪽에 있고 후쿠오카는 남쪽에 있다. 거리가 가깝게는 300km에서 멀게는 800km까지 떨어져있다 보니 취소 문의는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광진 여행타운 대표 또한 “안전을 걱정하는 연락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나 환불, 취소 등은 없어 여행업계에 별다른 타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여행사들은 일본 관광 호재를 반기면서도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노명아 굿초이스투어 대표는 “지진에 항공기 사고까지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 지금 여행 가도 괜찮겠냐는 전화와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일본 여행객들에게 ‘위험하니 가능한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취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는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문제다.



새해에는 금연 하세요 4일 오전 새해를 맞아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금연상담을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진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듯이,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여진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당장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

뇌물 전달 현직 경찰 간부 구속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청탁을 위해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하 영장전담 판사는 4일 뇌물교부 등 혐의로 해남경찰서 A(직위 해제)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이날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지난 2021년 인사 청탁을 위해 중간 전달자인 퇴직한 B 경정(구속)을 통해 수천만원을 퇴직한 C 전 경감(구속)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전 경감이 금품을 사건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D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 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

유죄 확정 모녀 청구 받아들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2023년 12월 29일자 광주일보 6면)이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는 4일 살인·준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A(74)씨와 딸 B(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부녀에 대해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부녀의 재심청구 이유 중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이 사건 화물차 관련 CCTV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증거라는 주장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09년 8월에 진행된 B씨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권리남용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봤다.

피의자 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

는 “검사가 B씨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B씨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A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 방법은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B씨가 진술을 변경했고 이 진술이 부녀의 공범관계를 명확히 한 점에서 더욱 위법한 수사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막걸리 구입과 관련해 A씨 화물차가 2009년 7월 1일부터 사건 당일인 7월 6일까지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의 촬영본을 확인한 결과 2009년 7월 5일 오전 7시 30분께에만 한 차례 촬영된 자료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았음에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한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기초수급자, 돈 없어 열쇠 수리공 못 불러 비밀번호 깜빡 외벽타고 들어가려다 추락사

광주 동구 50대 여성 숨져

건물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던 5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자신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탓에 비용에 부담을 느껴 열쇠공을 부르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광주동부경찰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50분께 동구 산수동의 4층 규모 원룸 건물 옥상에서 A씨(여·57)가 1층 도로로 추락했다.

A씨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옥상에 설치돼 있던 차량 그늘막을 꼬아 밟을처럼 만들고, 옥상 환기구 기둥에 묶은 뒤 이를 붙잡고 원룸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경찰 등에게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왔다가 집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손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급격적 부담 때문에 미처 도어락 수리공을 부를 엄두를 못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원룸 4층에서 홀로 살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근로 능력 상실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자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수급비는 62만 3000원 수준이었으며, A씨는 LH에서 제공하는 원룸에서 거주하며 월세 20만 3000원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어락 수리나 강제 개방을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내사 종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